

원안위, 발표 시간 맞추려 1시간 이상 수동정지 늦춘 의혹

한빛원전 1호기 첫 정지 명령...한수원 가동중단 왜 늦어졌나

오전 10시30분 '열출력 급상승' 12시간 지나 밤 10시 조치
무면허 직원 제어봉 조작 여부 놓고도 직원들간 진술 엇갈려

1986년 한빛원전 1호기가 가동된 이래 원자력안전위(이하 원안위)의 '발전소 사용정지 명령'(1호기에 한해)은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없는 운전원의 제어봉 조작 사실과, 원자로를 즉각 가동 중지해야 하는 사태(출력 제한치 초과)가 빚어졌는데도 12시간이나 지나 늦게 한빛 1호기를 세웠다던 점 등이 원자력안전위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 사용정지 명령과 함께 원안위는 수사관을 보내 특별 수사에도 착수했다.

자기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원자로 내에 삼입·인출돼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인 제어봉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매뉴얼(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출력이 제한치인 5%를 밑돌아야 하는데, 10일 오전 10시30분께 출력이 갑자기 18%까지 급상승한 것이다. 원전 측은 자체 조사와 원안위 지시를 받고 10일 밤 10시께 한빛 1호기 가동을 수동 정지시켰다.

이를 두고 원전 민간 전문가인 한병섭 박사(원자력공학)는 "정지 자체는 안전을 위한 행위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원자로 특성상 저출력 상태에서 원자로에 문제가 생기면 위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제어하기 힘들다"며 저출력 상태에서의 원전 정지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100% 정상 출력보다 저출력 상태에서의 위험성이 크다는 '원자력공학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원전 업계에서는 상식이라는 것이다.

한 박사는 이어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정지 저출력 시험 조건에서 대규모 원자로 폭발로 이어진 반면, TMI(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는 가동 중 발생한 것으로서 '핵연료 일부가 녹는' 상대적으로 작은 사고로 이어진 것을 보면 (위험성의 차이가) 확인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기계공학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원자력 업계의 다른 전문가도 "출력 5%를 초과하면 바로 정지해야 한다. 체르노빌과 같이

출력이 폭증할 수 있기 때문인데 18%까지 증가했다. 다행스럽게도 출력이 안정화되었지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면 아주 심각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 "원안위, 12시간 동안 대체 뭘했나"=원안위와 한수원은 10일 밤과 11일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한빛 1호기 열출력이 제한치를 순간적으로 초과해 수동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어봉 이상 징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언론 취재를 통해 "제어봉에서 문제가 생겼다"〈광주일보 2019년 5월 13일자 7면〉는 점이 드러났고, 사건 발생 10일이 지난 20일 원안위는 다시 한 번 보도자료를 내었다. '원자로조종사 면허 비보유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했다. 즉각 정지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사실상 12시간이나 지연된 10일 밤 10시에 원전을 수동정지했다'는 취지의 자료였다.

원안위는 그러면서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했는데, 그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면허 있는 자가 원자로(제어봉 포함)를 운전해야 하지만, 원자로조종사 감독 면허자의 감독 아래선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직원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감독면허가 있는 감독자와 무자격 운전자의 진술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지난 10일 발생한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의 경우 감독자는 "면허가 없는 직원 A씨에게 제어봉 조작 등 원자로 조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A씨는 "감독자 지시 아래 원자로를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감독자와 A씨가 입을 맞추면 관련법 위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소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영광 한빛원전의 모습.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원자로 면허 비보유자에 의한 제어봉 조작과 안전조치 미흡(가동 정지 사유 발생했지만, 지연 중단)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반이 아닌데도 한 명은 지시한 적 없다, 다른 명은 지시받고 운전했다고 원안위에 진술, 결국 수사를 받는 상황을 감독자와 무자격자 A씨가 자초했다는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설명한 그대로다. 감독자와 운전을 실제 한 직원 A씨 주장이 황당하지만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뉴얼에 따라 즉각 정지해야 하는

원자로를 12시간이나 운전 모드로 두고 뒤늦게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복수의 원전업계 관계자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한수원이 회의를 통해 이날 밤 원전을 수동정지하려 했으나, 원안위 측이 발표 시점과 맞추기 위해 고의로 1시간 이상 수동정지 시점을 늦췄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수동정지 시점을 고의로 늦춘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조치 지연 의혹과 별개로, 원자력업계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즉각정지 사유인 열출력 급상승 시점이 10일 오전 10시30분인데, 한빛 1호기가 같은 날 밤 10시에서야 정지된 것과 관련해 "사업자인 한수원 뿐 아니라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무려 12시간이나 늦게 놓고 있어 가능한 이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평화당, 문 대통령에 보안사 5·18문건 공개 요구

정동영 "5·18 진상규명 총력"

미국 기밀문서 공식 요청도

민주평화당은 20일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안사령부(보안사)와 미국 보유 5·18문건 확보 및 공개'를 요구했다. 또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여야에 개정한 처리와 조사위원 추천 마무리 등을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며 "첫째는 보안사 기밀문서를 열어젖히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이 갖고 있는 5·18 관련 기밀문서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보안사에서 근무했던 우리 당원이 제보해온 것이었다. 1980년 5월 당시 보안사령관은 전두환, 대공처장은 이학봉이었는데 보안사에 상황실이 설치되었고 실시간으로 전국의 첩보와 정보를 보고한 것이 현재 과천 안보지원사령부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방장관에게 특명을 내려 문서검증단을 파견하고 살살이 5월의 문서들을 검증해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며 "기밀을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문 대통령 한 사람 뿐"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6월 하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정상회담을 하러 온다. 문 대통령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5·18 기밀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5·18은 지난 18일 추모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27일까지 5·18 주간은 계속된다. 지난 행사로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극명하다"며 "오는 27일까지 5·18 진상규명위 출범 관련 법개정안에 합의하고 위원회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도 "5월이 다가 전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 5·18에 대한 의혹들이 날날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만약 진상규명위 추천을 할 수 없으면 다른 당에 추천권을 넘겨서라도 5·18 진상조사가 발족되도록 조치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자격 논란' 5·18조사위원 권태오 교체키로

군 출신 인사 다시 추천할 듯

민주 이윤정 대신 서애련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이윤정 조선대 교수 대신 서애련 변호사를 5·18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한데 이어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가운데 1명을 교체할 방침이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급물살을 탈 것인지 주목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전북 김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세관금신시도 33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1명을 교체했다. 한국당도 1명을 교체해서 추천하려고 한

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자격요건이 충분했는데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있다"며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를 포함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조사위원의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교체하기로 한 후보는 3성 장군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당이 추천한 권 전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특별법상 조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임명을 거부했다. 특별법에 명시된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자,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

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당시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지난달 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권 전 처장을 교체하겠지만, 특별법을 개정하고 다시 군 출신 인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당은 이동욱 전 기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위원 후보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은 여야 대치에 따른 조사위원 구성 지연으로 근거 법률 시행 후 8개월째 표류 중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110 20 point

6 8 2 4 7 5 8 1
108 14 point

2 5 1 6 4 9 7 8 3
102 12 point

1 3 0 7 5 8 4 9 2
100 10 point

2 4 6 3 7 1 2 8 0
105 8 point

4 6 2 8 1 0 9 7 3
103 6 point

2 7 6 2 1 4 3 0 2
102 5 point

4 6 7 8 9 0 1 2 3 4
101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안과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